2026년 7월 시청자평가원 활동실적

방송사명(법인명) :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

1. 회의 개최

o 일시 및 참석인원

일 시	참 석 인 원		
	시청자평가원	시청자위원회	방송사측
-	-	-	-

2.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운영 실적

프로그램명	편성시간	편성시간 변경
바로보는TV 옴부즈맨	본방송 매주 일요일 03:50~04:20 (재방송 매주 월 00:30~01:00)	해당사항 없음

o 방송현황

※ 프로그램 제목과 평가원 진술 주제를 3줄 이내로 기술

평가원명	방송일	방송 주요 내용	비고
김홍태	7/5	[뉴스10]중대범죄는 촉법연령 13세로…'조건부 하향' 결론 [뉴스1번지]미, 앤트로픽 '미토스5' 사용 제한 완화…"100여개 기업 허용"	
김경아	7/12	[뉴스1번지]검은 수요일' 코스피 5%↓…코스닥 800 하회 [뉴스프라임]OECD, 한국에 '보유세 강화' 권고"…성장률 2.6% 전망	
김정원	7/19	[와이드08]'바퀴 달린 스마트폰' 시대…완성차 업계 AI 경쟁 [뉴스잇]지나가니 '덜컹' 성수대교 단차…"괜찮다지만 불안"	
안지연	7/26	[뉴스오늘] 노사 모두 불만·소모적 논쟁…"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선해야 [뉴스워치] 믿고 찾아간 맛집…알고보니 '가짜 후기'	

3. 시청자평가원 변동사항 '변동사항 없음'

구 분	성 명	전・현직	평가원 선임일	비 고 (변경사유 등)
활동	김홍태	대한변호사협회 권익위원	2018. 06. 28	-
활동	안지연	동명대학교 광고 홍보학과 초빙교수	2023. 01. 31	-
활동	김정원	한양대학교 ERICA 미디어학과 교수	2025. 08. 21	-
활동	김경아	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2026. 02. 20	-

붙임 : 1. 평가원 진술 및 답변내용 1부.

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1부.

[붙임1]

<평가원 진술 및 답변 내용>

방송일시	평가원명	평가원 진술내용	답변내용
2026 7/5(일)	김홍태	중대범죄는 촉법연령 13세로… '조건부 하향' 결론 김태욱 기자 입력 2026-06-28 10:39 이번 보도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둘러싼 정부 논의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서, 사회적 대화협의체의 권고안과 갤럽 여론조사라는 상충된 데이터를 함께 제시해 균형감을 살렸습니다. 또한 '중대 범죄' 한정 적용이라는 절충안의 배경과, 법무부가 21대 국회 발의안을 참고해 살인·강도·성범죄·집단폭행 등을 기준으로 삼으려 한다는 구체적 내용을 전달해 시청자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중대 범죄'의 범주가 아직 미확정이라는 점은 언급했지만, 그로 인한 자의적 적용 우려나 형사미성년자 보호 취지 훼손 가능성 같은 비판적 시각은 다루지 않았는데요, 소년법 전문가나 인권단체의 반론, 그리고 두 달간의 공론화 결과가 사실상 뒤집힌 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균형 있게 짚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찬반 양측 전문가 인터뷰를 균형 있게 배치하고, 여론조사의 표본·질문 방식 등 출처 정보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무회의 보고 이후 세부 범죄 기준이 확정되면 후속 보도로 이어가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보고는 아직 확정안이 아니라 권고안 단계임을 유의해 주시고, 국무회의 결과와 이후 입법 절차를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한 리포트 안에 담을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는 관계로 다 담을 수 없었습니다. 후속 보도 등에 참고하겠습니다.

2026 7/12(일)	김경아	'검은 수요일' 코스피 5%↓…코스닥 800 하회 송고2026-07-08 16:07 양현주 기자 한 주간 보도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김경아입니다. 최근 반도체 고점 논란으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국내 증시가 이번에는 중동발 군사적 긴장감이라는 초대형 악재를 만나며 또다시 깊은 하락의 늪에 빠졌습니다. 지난 7월 8일,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동시에 5% 넘게 폭락하며 이른바 '검은 수요일'의 공포가 자본 시장을 강타했는데요. 반도체 업황 우려에 지정학적 위험까지 겹치며 시장의 변동성이 극에 달한 지금, 연합뉴스TV는 이 금융 시장의 위기 상황을 어떻게 보도하고 있을까요? 보도는 반도체 고점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동 리스크가 재발하면서 장 중 한때 코스피 7,000선마저 위협받았던 긴박한 시장 상황을 타전했습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5% 넘게 폭락하며 마감했고, 장중 매도세가 분출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나란히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기사는 이러한 폭락의 원인으로, 삼성전자의 역대급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퍼진 반도체 업황 피크아웃 우려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이란 간의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를 꼽았습니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장주들이 5~6%대 급락을 맞이했고, 외환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의 미국주식예탁증서(ADR) 상장 이슈에 따른 달러 유입 기대감으로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 아래로 급락하며 마감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시장이 가장 혼란스러운 시점에 증시 폭락의 다각적인 원인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규명했습니	증시 변동성에 대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각을 더 자세히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 주가가 떨어졌다는 현상 중계에 그치지 않고, 중동 리스크와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 그리고 외환시장의 특수 요인인 SK하이닉스 ADR 상장까지 유기적으로 연결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증시 보도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공포의 전염입니다. 보도는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주가는 폭락했다는 역설적인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언론은 단순히 피크아웃 우려가 확산했다는 시장의 지배적인 분위기를 수동적으로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우려가 과연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과도한 심리적 위축 때문인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빠지는 미스매치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의 엇갈리는 시각을 세밀하게 비교해 주었다면 개인 투자자들에게 보다 차분하고 균형 잡힌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2026 7/19(일)	김정원	[뉴스프라임]"내년 세수 500조+α"…미래대응기금 신설 활용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내년 세수는 당초 412조 원보다 20% 가량 늘어난 50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전례 없는 추가 세수'로 규정하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청년·지방·교육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히며 전력·용수 공급부터 교통·물류 인프라, 주거·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 구축까지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성장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은 연말까지 메가특구특별법 등 주요 경제 법안을 처리	경제 지표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하고 반응하는지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 특위를 중심으로 입법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반도체 호황이라는 일시적 요인에 따른 추가 세수를 기반으로 대규모 기금을 신설하는 것이 재정 운용 측면에서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빠진 점은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호황이 꺼진 이후에도 기금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보완됐다면 정책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더 냉정하게 따져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울러 야당의 반응을 함께 담았다면 보도가 더욱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2026 7/26(일)	안지연	〈뉴스리뷰〉 불길 잡았지만 잔불정리 장기전…3년 전에도 화재 입력 2026-07-21 20:35 한웅희기자 지난 18일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진화에만 사흘이 넘게 걸렸습니다. 큰불은 잡혔지만 현장에서는 잔불 정리가 계속됐고, 인근 주민들도 불편을 겪었는데요, 지난주 뉴스리뷰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보도는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61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다고 전했습니다. 밤샘 진화와 빗줄기에도 초진에만 이틀이 넘게 걸려 국내 물류센터 화재 중 초진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화재로 기록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국가소방동원령을 일부 해제하고 대응 단계를 하향해 잔불 정리에 주력하고 있고, 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건물 내부로 진입한 소방대원들은 열화상카메라 등을 통해 위험 요소를 확인하며 진화 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이 물류센터는 약 4개월 전 자체 진행한 소방	주변 분진과 연기 상태에 대한 리포트는 전날 별도로 제작해서 해당 리포트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시설 점검에서 25건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특히 발화지점으로 지목되는 6층은 화재감지기 배관 연결부 이탈을 포함해 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모두 '매우 경미한 건'으로 분류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물류센터 주변 주민들이 겪는 고통도 짚어봤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큰 불이 잡히고 대피령도 해제됐지만 인근 주민들이 체감하는 피해는 여전합니다. 대피소에서 집으로 돌아왔지만 화재 여파로 두통을 호소하거나 공기 청정기를 구입하는 등 대책을 세웠지만 밀려 들어오는 연기와 분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은 결국 다시 대피소로 발길을 돌렸고, 임시대피소에 마련된 현장 응급 진료소에는 하룻밤 사이 인후통을 호소하며 찾는 인원이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두 보도는 물류센터 화재 사고를 둘러싼 상황을 전했습니다. 큰불은 잡혔지만 화재의 영향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는데요, 잔불 정리가 이어지는 현장과 연기와 분진으로 다시 대피소를 찾은 주민들의 모습을 함께 전해, 진화 상황과 주민들이 체감하는 재난 상황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아울러 이 두 보도는 시청자들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을 확장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앞선 보도를 통해 화재 현장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게 하고, 이어진 보도에서 주변 주민들의 상황을 다뤄 사건의 범위를 자연스럽게 넓혔습니다. 같은 사건을 반복해 전달하기보다 현장 대응과 인근 주민들의 상황을 함께 전달해 화재 현장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 주변까지 함께 살펴봤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주민들이 겪는 불편과 불안을 전하는 데 비해, 연기와 분진의 상태가 어떻게 확인되고 있는지, 주민들의 귀가와 대피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지에 대	

		한 설명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현재 상황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까지 함께 제공했다면 더욱 풍부한 보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붙임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 김홍태 시청자평가원(26. 07. 05.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762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주간 보도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김홍태입니다. [뉴스10]에서는 정부가 형사 미성년자, 즉 '촉법소년'의 연령기준을 조건부로 하향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를 지시한 이후 공론화 절차를 진행해 왔는데요. 정부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로 1년 낮추는 방향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두 달간 공론화를 거쳐 만 10세에서 14세인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권고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지난 3월 한국갤럽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10명 중 8명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이를 두고 공론화 결과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고 결국 성평등 가족부와 법무부가 이런 여론 등을 고려해 '중대한 범죄'에 한해 기준 연령을 한 살 낮추는 조건부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촉법소년 관련 형법 개정안을 참고해 세부 기준을 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법안에는 살인과 강도를 비롯해 강간, 추행 등 성범죄, 집단 폭행 등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소년원에 3차례 이상 송치되면 형사책임을 면제받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둘러싼 정부 논의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서, 사회적 대화협의체의 권고안과 갤럽 여론조사라는 상충된 데이터를 함께 제시해 균형감을 살렸습니다. 또한 '중대 범죄' 한정 적용이라는 절충안의 배경과, 법무부가 21대 국회 발의안을 참고해 살인·강도·성범죄·집단폭행 등을 기준으로 삼으려 한다는 구체적 내용을 전달해 시청자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중대 범죄'의 범주가 아직 미확정이라는 점은 언급했지만, 그로 인한 자의적 적용 우려나 형사미성년자 보호 취지 훼손 가능성 같은 비판적 시각은 다루지 않았는데요, 소년법 전문가나 인권단체의 반론, 그리고 두 달간의 공론화 결과가 사실상 뒤집힌 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균형 있게 짚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찬반 양측 전문가 인터뷰를 균형 있게 배치하고, 여론조사의 표본·질문 방식 등 출처 정보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무회의 보고 이후 세부 범죄 기준이 확정되면 후속 보도로 이어가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보고는 아직 확정안이 아니라 권고안 단계임을 유의해 주시고, 국무회의 결과와 이후 입법 절차를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뉴스1번지]에서는 미국 정부가 앤트로픽의 인공지능 AI 모델 '미토스5'에 대한 사용 제한을 완화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지시간 26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앤트로픽이 '클로드 미토스5'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해 포천 500대 기업 명단에 드는 기업 등 100여 곳이 접근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토스5'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선지 2주만에 나온 변화로 오히려 미국의 AI 주도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속 규제를 일부 완화한 것이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수출통제 완화라는 핵심 사실과 발효 2주 만의 정책 선회라는 시점, 그리고 '포천 500대 기업 포함 100여 곳'이라는 구체적 수치를 명확히 전달한 점은 적절했습니다. AI 주도권 우려라는 배경 맥락도 짚어 시청자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미토스5'가 어떤 성능과 특징을 가진 AI 모델인지, 기존 AI 모델과 비교해 어떤 점이 뛰어난지 간단히 설명했다면 뉴스의 의미가 더욱 선명했을 것입니다. 또한 미국이 규제를 완화한 것이 우리나라 AI 산업과 반도체, 클라우드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국내 기업들에게는 기회인지 경쟁 심화 요인인지까지 함께 설명했다면 시청자들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6월 12일 상무부가 통제를 처음 발동한 계기, 즉 아마존 CEO가 재무장관에게 '미토스5 페이블5' 탈옥(jailbreak) 우려를 제기했고 중국 접근 우려가 겹친 배경 설명이 빠졌습니다. 또한 상무장관이 "언제든 재검토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단 점도 보도가 필요했습니다. [와이드11]에서는 노인 10명 가운데 1명은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환자라면서, 치매 환자를 위한 여러 안전망 확충이 중요한데,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안전지키미로 활약하는 치매안전마을이 있다고 전하며, 치매 대응 모의훈련현장을 취재했다고 전했습니다. 시장 한복판을 서성이던 치매 환자 연기자인 백발의 할머니가 정육점으로 들어서며, 고기 맛있겠다고 합니다. 평범한 손님같지만, 잠시 대화를 나눠보니 이상한데요, 집을 모른다고 하자, 정육점 사장님은 배운대로 할머니를 가게 한 구석에 앉히고, 환자가 안정되자 지체 없이 경찰을 불렀습니다. 심지은 서울 구로구 치매안심센터 부센터장은 당황스러워하지 말고 따뜻한 관심을 갖고 먼저 다가간다면 치매 어르신도 어려워하시지 않고 다가와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이 상황은 치매안심마을 안심지킴이들의 치매 대응 모의훈련인데요,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들을 지역사회에서 돌보게 해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 마을이며, 안심지킴이들은 치매 환자를 만나면 환자를 안정시키고 경찰에 안전하게 인계하도록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육점 사장님은 몸이 불편한 90세 어머니 생각에 안심지킴이 활동에 자원했는데요, 노창민 T 정육점 사장은 어머니가 몸이 불편하시고 치매도 약간 있으셔서 그런 분들을 보면 제가 좀 보탬이 될까 해서 도와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웃에 대한 작은 관심이 우리 사회에서 치매 환자들을 안전히 살아가게 하는 울타리가 되고 있다고 마무리 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치매 환자가 증가하는 초고령사회에서 지역사회가 함께 치매 환자를 보호하는 '치매안심마을'의 의미를 실제 모의훈련 현장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한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치매 환자를 발견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환자를 안정시킨 뒤 경찰에 인계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어 시청자들이 자연스럽게 올바른 대처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좋았습니다. 또한 정육점 사장이 자신의 가족 경험을 계기로 안심지킴이 활동에 참여하게 된 사연을 소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치매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 큰 힘이 된다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치매안심마을이 현재 전국에 얼마나 운영되고 있는지, 안심지킴이가 되기 위한 교육 과정과 참여 방법, 치매안심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서비스 등을 함께 소개했다면 시청자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치매 환자를 만났을 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나 보호자가 평소 준비해야 할 배회감지기, 배회 인식표, 지문 사전등록 등 예방제도도 함께 설명했다면 방송의 공익성과 활용도가 더욱 높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오늘] 에서는 아파트를 벗어나 단독주택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봤을 거라면서, 손쉽게 나만의 집을 짓고, 가전제품까지 한 번에 설치하는 '모듈러 주택'이 인기라고 전했습니다. 빌트인 냉장고가 있는 널찍한 주방부터 거실과 침실까지… 주택의 부분 부분을 미리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 방식으로 지어졌다면서 경기 화성에 지어진 단독주

택을 소개했습니다. 모듈러 주택은 기존 건설 방식보다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훨씬 적은 인력으로도 완성이 가능해 최근 주목 받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모듈러 주택 전문기업 공간제작소와 협력해, 도면 구상 단계에서부터 AI 가전과 스마트 홈 설루션을 결합하는 'AI 모듈러 홈'을 선보였습니다. 이 집은 미리 주문한 뒤 조립만 하면 되는 모듈러 방식으로 지어졌는데요.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도 인테리어에 포함됐고, 설치까지 완료된 상태로 배송됩니다. 필수적인 가전뿐 아니라 냉난방 비용을 줄여주는 스마트 가전, 안전을 지켜주는 홈캠도 설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보다 먼저 모듈러 주택 시장에 뛰어든 LG전자는 글로벌 업체들과의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모듈러 주택에 필요한 가전과 AI, 에너지 시스템을 공급하며 스마트홈 생태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편리한 시공 방식과 최신 가전을 결합한 모듈러 주택이 나만의 소중한 집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최근 주거문화의 변화와 함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모듈러 주택을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소개한 점이 돋보였습니다. 특히 실제 모듈러 주택을 보여주면서 기존 건축 방식과의 차이점, 공사 기간 단축, 인력 절감 등의 장점을 알기 쉽게 설명했고, AI 가전과 스마트홈 기술이 결합된 미래형 주거공간이라는 점을 함께 전달하여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또한 국내 대기업들이 모듈러 주택 시장에 적극 진출하고 있다는 내용을 통해 관련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미래 주거 트렌드를 소개한 점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30평 기준 구체적인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와 공사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에 대한 설명이 빠져 시청자가 실제 도입을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즉 초기 건축비, 부지 구입 비용, 인허가 절차, 단열과 내구성, 유지관리 비용, 일반 주택과의 가격 비교 등을 함께 제시했다면 실제 주택을 계획하는 시청자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정보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모듈러 주택 지원 정책이나 향후 시장 전망, 실제 입주자의 만족도와 불편 사항까지 소개했다면 보도의 깊이가 한층 더했을 것입니다. 새로운 주거 형태를 선택할 때는 편리함이나 최신 기술만 보기보다 건축비와 유지비, 안전성,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충분히 비교·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며, 현재 관련 사업이 어느정도 단계에 와 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 김경아 시청자평가원(26. 07. 12.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763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 주간 보도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김경아입니다. 최근 반도체 고점 논란으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국내 증시가 이번에는 중동발 군사적 긴장감이라는 초대형 악재를 만나며 또다시 깊은 하락의 늪에 빠졌습니다. 지난 7월 8일,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동시에 5% 넘게 폭락하며 이른바 '검은 수요일'의 공포가 자본 시장을 강타했는데요. 반도체 업황 우려에 지정학적 위험까지 겹치며 시장의 변동성이 극에 달한 지금, 연합뉴스TV는 이 금융 시장의 위기 상황을 어떻게 보도하고 있을까요? 보도는 반도체 고점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동 리스크가 재발하면서 장 중 한때 코스피 7,000선마저 위협받았던 긴박한 시장 상황을 타전했습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5% 넘게 폭락하며 마감했고, 장중 매도세가 분출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나란히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기사는 이러한 폭락의 원인으로, 삼성전자의 역대급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퍼진 반도체 업황 피크아웃 우려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이란 간의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를 꼽았습니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장주들이 5~6%대 급락을 맞이했고, 외환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의 미국주식예탁증서(ADR) 상장 이슈에 따른 달러 유입 기대감으로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 아래로 급락하며 마감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시장이 가장 혼란스러운 시점에 증시 폭락의 다각적인 원인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규명했습니다. 주가가 떨어졌다는 현상 중계에 그치지 않고, 중동 리스크와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 그리고 외환시장의 특수 요인인 SK하이닉스 ADR 상장까지 유기적으로 연결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증시 보도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공포의 전염입니다. 보도는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주가는 폭락했다는 역설적인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언론은 단순히 피크아웃 우려가 확산했다는 시장의 지배적인 분위기를 수동적으로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우려가 과연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과도한 심리적 위축 때문인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빠지는 미스매치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의 엇갈리는 시각을 세밀하게 비교해 주었다면 개인 투자자들에게 보다 차분하고 균형 잡힌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국제기구가 내놓는 경제 보고서는 한 국가의 경제 체력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거울입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제와 연금, 그리고 재정 정책 전반을 진단한 '한국경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물려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연합뉴스TV는 심층적인 경제 뉴스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살펴보시죠. OECD는 한국의 부동산 세제 구조에 대해 거래세 비중을 낮추고 보유세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쓴소리를 냈습니다. 한국의 보유세 비중이 OECD 평균인 56%의 절반 수준인 29.4%에 불과해 왜곡이 심하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2035년까지 국민연금 수급 및 납입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대내외적 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고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고 재정 부담이 큰 유류세 인하와 최고가격제는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분량이 방대하고 다소 딱딱할 수 있는 국제기구의 경제 보고서를 시청자의 관심도가 높은 핵심 의제 중심으로 압축해 전달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나 2060년 노년

부양비 80% 같은 구체적인 통계 지표를 시각 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보도의 객관성을 높였습니다. 나아가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OECD 담당 과장의 인터뷰를 나란히 배치함으로써, 권고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인식과 국제기구의 진단을 균형 있게 보여준 짜임새 있는 보도였습니다. 그러나 OECD의 권고 사항이 지닌 국내 정책 기조와의 충돌 가능성과 민생 현실'에 대한 입체적 분석이 생략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국제기구의 이러한 정석적인 권고안이 실제 우리 경제 현장에 적용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영향력도 함께 짚어주어야 합니다. 숫자로 보여주는 성적표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제 정책과의 함수관계를 풀어주는 해설이 부족했습니다.앞으로 국제기구의 낙관적 성장률 전망 뒤에 숨은 세부 과제들을 까다롭게 검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리포트를 기대합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가혹하고 어두운 단면을 마주할 때, 언론은 단순한 고발자가 아닌 사법 정의와 사회 안전망의 파수꾼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극도의 영양결핍으로 목숨을 잃은 생후 19개월 아동의 비극적인 사망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충격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데요, 피고인의 죄명을 둘러싼 법리적 쟁점과 사회적 안전망의 구멍을 연합뉴스TV가 어떻게 들여다보았는지 관련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생후 19개월 된 딸을 상습적으로 방치해 영양결핍과 탈수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숨진 아이의 몸무게는 또래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7kg에 불과했고, 사망 전 최대 67시간 동안 방치되는 등 극심한 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친모가 매달 300만 원이 넘는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개인 취미 생활을 즐기는 등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친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계선 지능인으로서 양육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은 점, 그리고 사회 안전망 부재 속에서 벌어진 우발적 사고라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며 '아동학대살해죄' 인정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보도는 자칫 감정적 비난에만 치우치기 쉬운 아동학대 사건을 법리적 쟁점과 구체적인 팩트 중심으로 차분하게 짚어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단순히 경제적 빈곤 때문에 발생한 비극이 아니라 양육 의무의 완전한 포기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검찰의 미필적 고의 주장과 피고인 측의 경계선 지능 및 사회 안전망 부재라는 항변을 균형 있게 배치하여, 다가올 선고 공판의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를 시청자들에게 객관적으로 전달하려 노력한 점이 돋보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참혹한 사건을 다룰 때, 미디어가 반드시 짚어야 할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기사 말미에 피고인 측 변호인의 입을 빌려 사회 안전망의 부재라는 표현이 언급되기는 했습니다만, 언론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피고인이 정부로부터 매달 3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복지 급여를 받고 있었음에도, 그리고 '경계선 지능인'이라는 인지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왜 행정 당국과 지역사회의 모니터링 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는지 그 공백을 날카롭게 질문했어야 합니다. 행정 당국의 추적 관리 한계나 아동보호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 같은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는 보도가 필요합니다. 뉴미디어 시대,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허위 정보와 이른바 '사이버 렉카'의 폐해는 심각한 사회적 공해로 규정된 지 오래입니다. 타인의 인격을 말살하는 악의적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뼈대로 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본격 시행에 돌입했습니다. 강력한 처벌의 정당성 뒤편에 존재하는 또 다른 우려와, 표현의 자유 경계는 어디인지, 연합뉴스TV의 보도를 통해 짚어보겠습니다. 보도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핵심 내용과 유의점을 전했습니다. 이제 언론사나 구독자 10만 명 이상의 유튜버 등이 허위·조작 정보임을 알면서도 이를 유포해 피해를 입히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불법성이 확정된 내용을 반복 유포해 이익을 얻을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어, 악성 유튜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기대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려의 목소리도 담았습니다. 단순 비판이나 풍자와 가짜뉴스를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고, 유튜브 등 플랫폼 기업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콘텐츠를 삭제하는 과잉 규제나 내부 고발 위축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을 함께 전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새로운 법안의 시행이라는 정책 뉴스를 전달하면서, 법의 긍정적 기대 효과와 잠재적 부작용을 균형 있게 다루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단순히 가짜뉴스를 처벌한다는 당위성에만 치중되지 않고, 구체적인 적용 대상을 명확히 제시해 실효성 있는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나아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법률의 모호성이 가져올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위축이나 '플랫폼의 과잉 대응이라는 미디어 생태계의 현실적인 우려를 짜임새 있게 짚어냈습니다. 그러나 기사가 제기한 우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깊이 있는 분석이 부족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언론사와 유튜버를 정보 게재자라는 하나의 틀로 묶어 규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성 언론사는 데스크의 게이트 키핑과 정정 보도 등 자정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반면, 일부 유튜버들은 조회수 수익만을 노리고 고의적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론 보도의 '공익 목적의 의혹 제기'와 악성 유튜버의 '악의적 돈벌이'를 같은 선상에서 규제할 때 발생할, 저널리즘의 위축 문제를 언론 스스로가 조금 더 날카롭게 파고들었어야 합니다. 협오와 편 가르기가 가시적으로 드러날 때 갈등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화해와 치유의 성숙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언론이 수행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저널리즘의 기능일 것입니다. 고교 야구 경기라는 청소년 스포츠 현장에서 터져 나온 역사 왜곡 구호 사태와 이에 대해 엄격한 징계 대신 따뜻한 용서와 포용의 손을 건넨 피해 당사자들의 소식이 전해져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기사는 고교 야구 경기 중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로부터 '6개월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배재고등학교 야구부를 위해, 피해 당사자 격인 광주제일고등학교 측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내용입니다. 광주일고 교장과 총동창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 야구장은 치열한 승부의 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배움의 장이라며 학생들이 경기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징계를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앞서 배재고 야구부 측은 광주일고를 직접 찾아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며 반성의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징계 확정 시 대학 진학에 큰 차질을 빚게 되는 배재고 학생들을 위해 광주일고가 보여준 포용의 행보가 향후 재심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갈등과 단죄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용서와 화해라는 신선하고 긍정적인 가치를 전면에 부각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습니다. 자칫 자극적인 폭로전이나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 쉬운 학원 스포츠 내의 갈등 상황을 다루면서, 양교가 갈등을 봉합해 나가는 구체적인 과정인 직접 사과'와 '5·18 민주묘지 참배', 그리고 '선처 기자회견'까지의 타임라인을 차분하게 짚어냈습니다. 또한, 광주일고 교장과 총동창회장의 인터뷰를 균형 있게 배치하여 단순한 온정주의가 아닌, '징벌보다 교육이 우선해야 한다'는 어른들의 책임감 있는 메시지를 시청자들에게 깊이 있게 전달했습니다. 갈등을 키우는 미디어가 아닌, 화해의 가치를 지키고 대안을 모색하는 뉴스, 그것이 시청자가 원하는 공익 보도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 김정원 시청자평가원(26. 07. 19.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764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 주간 보도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김정원입니다. 엔진과 연비 중심이었던 자동차 경쟁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접목되면서 자동차가 움직이는 문화기술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차량용 인공지능이 일상적인 질문에 막힘없이 답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 기반의 AI 기술이 적용되면서 정해진 명령어를 넘어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해졌고, 운전자가 "바람을 쐬고 싶다"고 말하면 AI가 상황을 판단해 창문을 여는 등 맥락을 인지하는 유기적인 제어도 구현되고 있습니다. 주행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경로를 제안하고, 실시간 온라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기 장소를 추천한 뒤 곧바로 내비게이션으로 연결하는 기능도 등장했습니다. 스마트폰처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기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것도 특징입니다. 과거 마력과 엔진이 자동차 경쟁의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소프트웨어와 AI 성능이 미래 자동차 시장의 새로운 생존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보도는 차량 AI 기술의 발전 양상을 구체적인 기능 사례와 업계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자동차 경쟁의 패러다임 변화를 명확한 대비로 짚어낸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편 차량에 탑재되는 AI가 수집하는 주행 데이터와 대화 내용 등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은 아쉽습니다. 또한 AI가 차량을 직접 제어하는 상황에서 오작동이나 해킹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가능성도 제시했다면 기술 혁신의 편의성뿐 아니라 이면의 위험성도 균형 있게 전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학령 인구는 줄어드는데 내국세 연동 구조로 교육교부금은 오히려 늘어나는 현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교육교부금 배분 방식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찬반 논쟁이 팽팽한데요.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현행법상 내국세의 약 20%는 교육교부금으로 의무 배정됩니다. 국가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교부금도 늘어나는 구조인데, 학령 인구는 오히려 크게 줄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 10년간 학생 1인당 연간 교육교부금은 7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2배 넘게 올랐습니다. 교부금을 배정받는 초중고 교육과 영유아·대학 교육 간의 형평성 문제도 핵심 쟁점입니다. 17년째 등록금 동결이 이어지며 대학들이 재정난을 호소하는 반면, 초중고 교육교부금은 계속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도 교육교부금이 자동 배정되는 점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반면 교육을 단순한 경제 논리로 봐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교부금 개편이 미래교육을 포기하는 행위라며 논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예산당국은 곧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데, 교육교부금 총액은 줄이지 않으면서 내국세 20% 배분 방식만 손보는 절충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이 보도는 교육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찬반 논거를 전문가와 교육계 양측의 시각을 통해 균형 있게 전달했습니다. 학생 수 감소와 교부금 증가라는 역설적 현실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한 점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다만 개편 논의가 해묵은 과제임에도 번번이 결론을 내지 못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빠진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교육계의 반발과 재정당국의 입장이 왜 평행선을 달려왔는지를 함께 설명했다면 시청자들이 이 문제의 맥락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조건부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론화 이후 5개월 만에 나온 절충안인데요. 연합뉴스TV 보도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정부는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1세 하향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대 범죄의 구체적인 기준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살인·강도·성범죄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론화 지시 이후 5개월 만에 나온 결론으로, 공론화 절차 마무리 후에도 두 달 넘게 발표가 미뤄질 만큼 논쟁이 첨예했습니다. 시민 조사에서는 연령 하향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법이 만들어진 1950년대와 비교해 청소년의 범죄 환경이 크게 변했고, 처벌 가능성이 범죄 억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여론이 힘을 얻은 것입니다. 다만 처벌 강화가 실제 범죄 예방으로 이어지느냐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정부는 소년사법 체계 전반의 개선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보도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라는 민감한 사안을 찬반 양측의 논거와 함께 입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공론화 과정과 결론 도출까지의 경위를 함께 짚어 정책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그러나 조건부 하향의 핵심인 중대 범죄의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빠진 점은 아쉽습니다. 또한 처벌 강화가 실제 범죄 예방으로 이어지느냐는 반대 측의 논거가 다소 짧게 다뤄진 점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교화와 재활 중심의 소년사법 체계를 지지하는 전문가 의견이 구체적으로 담겼다면 시청자들이 정책의 실효성을 더 냉정하게 따져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수대교 남단 진입 구간에 9cm 가량의 단차가 발견돼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참사를 기억하는 시민들의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성수대교 남단 진입 구간에서 약 9cm의 단차가 발견됐습니다. 다리 본선부와 땅과 연결된 옹벽부가 만나는 곳의 일부가 내려앉은 것으로 보이고, 시속 30km 미만으로 지나가도 위아래로 흔들리는 것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이 단차를 인지해왔으며 안전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안전을 재확인하고, 정밀안전진단과 한강교량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참사를 기억하는 시민들은 불안을 완전히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안전 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는 현장 영상과 직접 주행 테스트, 시민 인터뷰를 통해 단차 문제를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서울시의 공식 입장과 시민들의 불안을 함께 담아 사안을 다각도로 보여줬습니다. 다만 서울시가 2016년부터 이 단차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음에도 그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이 빠진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9년간 방치된 경위와 그 사이 안전 점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짚었다면 서울시의 안전 관리 체계에 대한 보다 비판적인 시각을 전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반도체 대호황으로 내년 세수가 당초보다 20% 가량 늘어난 50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추가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는데요.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내년 세수는 당초 412조 원보다 20% 가량 늘어난 50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전례 없는 추가 세수'로 규정하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청년·지방·교육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히며 전력·용수 공급부터 교통·물류 인프라, 주거·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 구축까지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성장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은 연말까지 메가특구특별법 등 주요 경제 법안을 처리

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 특위를 중심으로 입법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이 보도는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된 추가 세수의 규모와 활용 방향을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대통령의 구상과 여당의 입법 지원 계획을 함께 담아 정책 추진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점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호황이라는 일시적 요인에 따른 추가 세수를 기반으로 대규모 기금을 신설하는 것이 재정 운용 측면에서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빠진 점은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호황이 꺼진 이후에도 기금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보완됐다면 정책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더 냉정하게 따져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울러 야당의 반응을 함께 담았다면 보도가 더욱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중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 창신메모리가 약 6조 5천억 원 규모의 대형 상장에 나서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에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 피크아웃 우려 속에 중국의 추격이 본격화되는 모습인데요.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 창신메모리가 약 6조 5천억 원 규모의 IPO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조달 자금 대부분을 범용 D램 개발에 투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년 만에 글로벌 점유율을 약 8%까지 두 배 끌어올린 데 이어 추격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중국 정부 주도로 육성해온 반도체 산업에 민간 자금까지 더해지는 신호탄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당장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 세계 D램 시장의 67%, HBM 시장의 79%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범용 메모리 물량 경쟁에서 벗어나 AI 시대 핵심인 차세대 HBM 개발에 앞장서고 있어, 중국이 고객 맞춤형 메모리 시장으로 영역을 넓히더라도 최고 수준의 기술력 확보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 보도는 창신메모리 상장이라는 구체적인 사건을 계기로 중국 반도체 굴기의 현황과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함께 짚어 반도체 패권 경쟁의 구도를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한편 현재 국내 기업이 압도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에 무게를 두다 보니, 중국이 대규모 자본을 앞세워 기술 개발 속도를 높일 경우 중장기적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부족했습니다. 당장의 격차보다 향후 추격 가능성을 더 구체적으로 짚었다면 시청자들이 이번 사안의 무게를 더 실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 안지연 시청자평가원(26. 07. 26.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765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 주간 보도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안지연입니다. 지난주,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차량 침수사고의 위험도 증가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도로나 지하차도에 물이 불어날 경우, 차량이 고립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보도는 폭우로 침수 경보 발령 시 운전자의 대응 요령을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수위가 약 30㎝일 때는 타이어 절반과 운전석 바닥까지 물이 차지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러나 50㎝에 이르면 차량 안팎의 수압 차이 때문에 문을 열기 어려워지고, 침수 구간을 빠르게 주행하면 엔진이 꺼질 가능성도 커집니다. 이미 침수 구간에 진입했다면 속도를 줄이고 창문을 미리 열어두어야 하는데요, 차량 운행이 어려워지면 창문으로 빠져나오거나, 차량 안팎의 수위가 비슷해져 문이 열릴 때 즉시 탈출해야 합니다. 이를 놓쳤다면 비상 탈출용 망치로 유리창을 깨고 탈출을 시도해야 하며, 발로 차거나 안전벨트 클립, 머리 받침대 등으로 유리창을 깨기는 쉽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흔히 알려진 방법들로 창문을 깨고 탈출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비상 탈출용 망치 등 작은 안전 장비를 미리 구비하는 것이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을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보도에서는 무엇보다 침수된 도로에 들어가지 않고, 물이 빠르게 불어날 수 있는 지하차도를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보도는 집중호우로 차량이 침수됐을 때 운전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주목했습니다. 수위에 따라 차량의 상태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창문을 열어야 하는 시점과 문을 통해 탈출할 수 있는 조건도 잘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 침수 실험 장면을 통해 물이 차오르는 높이에 따라 차량 내부와 문 개방 상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직접 보여줘 시청자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또한, 실험 장면을 통해 보편적으로 알려진 탈출 방법이 다소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짚었는데요, 비상 탈출용 망치를 준비해야 한다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해 시청자가 잘못된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보다 현실성 있는 대응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여러 대응 요령이 연속해서 제시된 만큼, 보도 말미에 상황별 행동 순서를 그래픽이나 자막으로 간단히 정리했다면 시청자가 핵심 내용을 한눈에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노사가 큰 입장 차를 보이고 최종적으로 표결에 이르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결정 방식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주 연합뉴스TV의 관련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최저임금 결정 시 반복되는 노사 갈등에 대해 주목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노사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과정에서 13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결국 표결로 결정됐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 오히려 노사 갈등만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 된다고 전했는데요, 27명의 최저임금 위원 가운데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이 각각 9명으로, 대폭인상과 동결로 맞붙어 사실상 합의가 어려운 구조가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공익위원들은 정부가 위촉해 해마다 정치적 편향성 시비도 이어지는데요,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큰 위원회의 규모를 지적하며 15명으로 조정하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보도는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노사 측이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것과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및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도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

는 지적도 덧붙였습니다. 이 보도는 소모적 논쟁이 반복되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의 개선 필요성을 다뤘습니다. 노사 양측이 여러 차례 수정안을 제시하고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과정을 설명하며 현행 방식에서 비슷한 갈등이 되풀이되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의 인상 수준이나 어느 한쪽의 책임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갈등이 반복되는 원인을 제도와 절차의 문제로 확장해 다뤘는데요, 이를 통해 최저임금 논란을 단순한 노사 간 대립으로 보는 데서 벗어나, 합의를 어렵게 만드는 현재의 결정 방식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잘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요, 결정 구조 개선 방향은 제시했지만 현행 방식과의 차이점과 그로 인한 변화 등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제안된 개선 방향의 적용 방식과 예상 효과 등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뤘다면 시청자들이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식당을 고르거나 병원을 찾을 때 온라인에서 후기와 평점을 먼저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 이용하지 않고도 후기를 작성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지난주 연합뉴스TV의 관련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실제 이용한 적 없는 허위 후기를 조명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광고업체 운영자 A씨 등은 최근 5년간 도용한 계정으로 병원과 식당, 카페 등 전국 700여 개 업체에 2만 8천여 차례 허위 후기를 올려 광고주들로부터 챙긴 금액이 20억 원 가까이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법도 치밀했는데요, 도용 계정과 보안망 우회 프로그램을 동원해, 실제 방문한 것처럼 꾸미고 광고주가 건넨 다른 손님의 결제 영수증과 업체 사진까지 후기 작성에 활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광고업체 운영자 3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다른 업자와 광고주 등 23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아울러 범죄수익금 17억 8,50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하는 한편, 검거되지 않은 광고주 등 거래업체 700여 곳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보도는 소비자가 참고하는 온라인 후기가 실제 이용 경험이 아니라 광고 목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소개했습니다. 일상적으로 접하는 정보가 조직적으로 조작됐다는 사실을 통해 온라인 후기만으로 업체를 판단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줬습니다. 이와 함께, 가짜 후기의 규모와 작성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단순한 과장 광고가 아니라, 소비자의 판단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문제라는 점을 드러냈는데요, 실제 방문 후기처럼 보이도록 계정과 영수증, 사진 등을 활용했다는 사실을 전해, 이용자가 허위 후기를 쉽게 구별하기 어려운 이유도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허위 후기가 실제 소비자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조작된 후기를 믿고 업체를 이용한 소비자의 경험이나 피해 사례를 함께 다뤘다면, 가짜 후기가 소비자의 판단과 선택을 어떻게 왜곡하는지 더욱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 18일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진화에만 사흘이 넘게 걸렸습니다. 큰불은 잡혔지만 현장에서는 잔불 정리가 계속됐고, 인근 주민들도 불편을 겪었는데요, 지난주 뉴스리뷰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보도는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61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다고 전했습니다. 밤샘 진화와 빗줄기에도 초진에만 이틀이 넘게 걸려 국내 물류센터 화재 중 초진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화재로 기록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국가소방동원령을 일부 해제하고 대응 단계를 하향해 잔불 정리에 주력하고 있고, 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건물 내부로 진입한 소방대원들은 열화상카메라 등을 통해 위험 요소를 확인하며 진화 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이 물류센터는 약 4개월 전

자체 진행한 소방시설 점검에서 25건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특히 발화지점으로 지목되는 6층은 화재감지기 배관 연결부 이탈을 포함해 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모두 '매우 경미한 건'으로 분류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물류센터 주변 주민들이 겪는 고통도 짚어봤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큰 불이 잡히고 대피령도 해제됐지만 인근 주민들이 체감하는 피해는 여전합니다. 대피소에서 집으로 돌아왔지만 화재 여파로 두통을 호소하거나 공기 청정기를 구입하는 등 대책을 세웠지만 밀려 들어오는 연기와 분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은 결국 다시 대피소로 발길을 돌렸고, 임시대피소에 마련된 현장 응급 진료소에는 하룻밤 사이 인후통을 호소하며 찾는 인원이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두 보도는 물류센터 화재 사고를 둘러싼 상황을 전했습니다. 큰불은 잡혔지만 화재의 영향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는데요, 잔불 정리가 이어지는 현장과 연기와 분진으로 다시 대피소를 찾은 주민들의 모습을 함께 전해, 진화 상황과 주민들이 체감하는 재난 상황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아울러 이 두 보도는 시청자들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을 확장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앞선 보도를 통해 화재 현장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게 하고, 이어진 보도에서 주변 주민들의 상황을 다뤄 사건의 범위를 자연스럽게 넓혔습니다. 같은 사건을 반복해 전달하기보다 현장 대응과 인근 주민들의 상황을 함께 전달해 화재 현장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 주변까지 함께 살펴봤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주민들이 겪는 불편과 불안을 전하는 데 비해, 연기와 분진의 상태가 어떻게 확인되고 있는지, 주민들의 귀가와 대피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현재 상황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까지 함께 제공했다면 더욱 풍부한 보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대표 방송스틸컷

일시/장면설명	일시/장면설명
2026년 7월 5일 04시/ 김정원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	2026년 7월 12일 04시/ 김경아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일시/장면설명	일시/장면설명
2026년 7월 19일 04시/ 김홍태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	2026년 7월 26일 04시/ 안지연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
	